

2016년 경찰공채 2차 정답과 해설

사회문화(1~8번, 8문제)
경제(9~15번, 7문제)
법과정치(16~20번, 5문제)

O1	①	O2	④	O3	③	O4	②
O5	①	O6	②	O7	①	O8	③
O9	③	10	②	11	③	12	②
13	④	14	③	15	③	16	③
17	④	18	①	19	②	20	①

1.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 현상의 연구 방법-실증적 연구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은 실증적 연구 과정의 일부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① (X)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과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입니다. 실증적 연구 방법은 경험적 자료의 계량화를 통한 법칙 발견을 중시합니다.
- ②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자료를 수치화하여 사회 현상 속에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하려는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 ③ (O) 실증적 연구 방법은 사회 현상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칙이란 현상 간의 규칙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치화된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 사용된 표현이 수치화하기 어려운 추상적 개념인 경우 수치화 가능한 개념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 ④ (O)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가설설정 다음인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2. [정답] ④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계급 vs 계층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계급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나뉘기 때문에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계층은 경제적 자원, 정치적 권력, 사회적 지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나뉘기 때문에 다원론이라고 합니다.
- ② (O) 계급 이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계급은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계급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무산 계급은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대립이 발생합니다. 외집단과의 갈등은 내집단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계급 내 결속력이 강하고, 동일 계급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계층 간의 경계도 명확하지 못하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계층끼리 결속하기보다는 개인적 노력을 통해 상승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한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③ (O) 계급 이론에 따르면 유산 계급은 무산 계급을 착취하고 무산 계급은 이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계급 관계는 대립적입니다. 그러나 계층 이론에 따르면 계층이 연속선상에 배열되어 있어 계층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계층 간의 관계가 반드시 적대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④ (X) 계급과 계층 모두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결과 개인과 집단이 서열화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계층이 집단 간의 평등한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3.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일탈 행위론-갈등 이론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에서 화자(話者)는 '갈등 이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일탈 행동에 대해 항변하고 있습니다.

- ㉠ (X) 일탈이 사회적 낙인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입니다.
- ㉡ (O) 갈등 이론은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다른 주장이나 행동을 문제 삼은 결과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 ㉢ (O) 갈등 이론에 따르면 일탈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투쟁의 산물입니다. 지배 계급은 현재의 사회 체계와 사회 질서의 유지를 바라고 있어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과 갈등을 일탈 행동으로 보아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특히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을 일탈자로 규정하여 지배 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 (X) 일탈이 접촉과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차별적 교제(학습)이론입니다.

4.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빈곤의 유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빈곤은 일종의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게으른 성격이나 경쟁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원인을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 ② (X) 중위 소득의 1/2 이하의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입니다.
- ③ (O) 경제적 수준이 높다는 것은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말 그대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국민 평균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이 더 중시됩니다.
- ④ (O) 경제 발전으로 인해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적 빈곤율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 여전히 절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 11위, 1인당 GDP 28위에 올라있는(2016년 IMF 기준)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절대적 빈곤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5.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V. 사회 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적 소수자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제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책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Affirmative Action)입니다.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란 종래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 온 특정 집단에 대해 그 동안의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그 집단의 구성원에게 취업이나 입학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부여하는 국가의 정책을 의미합니다.

- ① (X) 제시문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려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의식적 측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 ②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O)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우선적인 배려를 하는 정책인데 이 과정에서 다수 집단에 속하는 사람을 역으로 소외시키는 역차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④ (O) 여성 공천제, 장애인 고용 할당제, 공무원의 양성 채용 목표제는 모두 소외받는 집단의 사회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6. [정답] ②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의 특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기 때문에 지위 획득과 성과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무가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기회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② (X) 목적 전치 현상은 목적 달성을 뒷전으로 하고 오히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규칙과 절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입니다.
- ③ (O) 관료제는 위계가 명확하고 업무가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놓고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상명하달식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권력과 정보가 소수에게 독점되고 일부 상층의 이익을 위해 조직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④ (O) 관료제의 임기 보장,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과 보상은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사안일주의라는 문제점도 함께 야기합니다.

7. [정답] ①

[출제단원] 사회문화 -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 (O) 기존의 연구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받아들이는 개방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 (O)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대주의적 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 ㉢ (X) 어떤 현상에 대해 바람직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된 것으로 이는 객관적 태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 (X)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 현상에 미치는 더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내면에 담긴 인과 관계나 의미를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성찰적(반성적) 태도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8. [정답] ③

[출제단원] 사회문화 -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역할 갈등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O) 안 모 씨는 과장이라는 하나의 지위에 부장님의 지시를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과 부하 직원의 요구를 수렴해서 부장님에게 전달해야 하는 역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지위에 서로 다른 역할의 수행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긴장이라고 합니다.
- ② (O) 안 모 씨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 하는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주말에 야근을 해야 하는 직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상반된 역할이 동시에 요구될 때 나타나는 역할 갈등을 역할 모순이라고 합니다.
- ③ (X) 안 모 씨가 겪고 있는 역할 갈등은 직원과 가족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역할 간의 충돌입니다.
- ④ (O) 관용의 정신과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은 안 모 씨 뿐만 아니라 김 모 씨, 박 모 씨, 최 모 씨 등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지구촌 인류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당연한 선택지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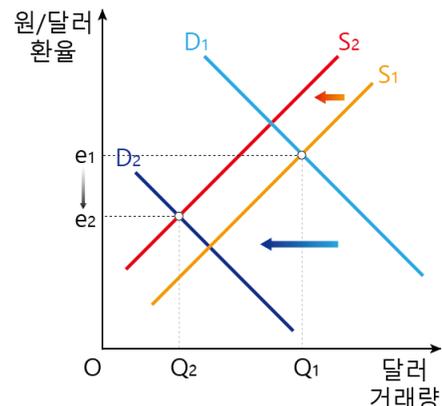
9.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환율 변동의 요인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①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상하면 미국의 금리가 상승합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금리에 비해 높아지면, 미국 금융 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므로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 금융 자산에 투자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 ②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품 대신 가격이 낮은 미국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 ③ 수출이 감소하면 외화의 공급이 감소하고, 수입이 감소하면 외화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다면, 외화 공급의 감소폭에 비해 외화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④ 우리나라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우리나라 상품 대신 가격이 낮은 미국 상품을 소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달러(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10.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고용 관련 지표의 계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O) 경제 활동 참가율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합이므로, 경제 활동 인구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뺀 28,000명(=32,000-4,0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87.5\% \left(= \frac{28,000}{32,000} \times 100 \right)$ 입니다.

② (X)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고용률은 $65.625\% \left(= \frac{21,000}{32,000} \times 100 \right)$ 입니다.

③ (O) 실업률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므로, 실업자 수는 경제 활동 인구에서 취업자 수를 뺀 7,000명(=28,000-21,0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실업률은 $25\% \left(= \frac{7,000}{28,000} \times 100 \right)$ 입니다.

④ (O) 이 나라의 경제 활동 인구는 28,000명입니다.

[참고] 실제로 출제된 문제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12,000명으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경우 경제 활동 인구가 20,000명, 취업자 수가 21,000명이 되어 문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의 경우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으나, 위에서는 비경제 활동 인구를 4,000명으로 변경하여 문제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1.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GDP의 계산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 (X) 집값의 상승은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에 불과하므로, GDP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O) GDP를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중간재 5억 원어치가 수출되면 그만큼 순수출이 증가하므로 GDP도 5억 원 증가합니다.

㉢ (X) 올해 5,0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생산되었다면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의 GDP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올해 GDP는 작년과 비교해 5,000만 원 증가했을 것입니다.

㉣ (O) GDP를 분배 측면에서 보면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면 그만큼 GDP도 증가합니다.

12. [정답] ②

[출제단원] 경제 - II.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출제영역] 조세의 분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X) 주세는 국세로 분류됩니다. 도축세는 과거에는 지방세로 분류되었으며, 현재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도축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② (O) 소득세는 누진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비례세가 적용됩니다. 비례세는 역진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③ (X)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세는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② 도세, ③ 구세, ④ 시군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합니다.

구분	보통세	목적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나 시군세로 분류되거나, 지방교육세는 특별시세(광역시세)나 도세로 분류됩니다.

④ (X) 법인세는 직접세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만,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에 해당하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13. [정답] ④

[출제단원] 경제 -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 안정화 정책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O)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이에 따라 시중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는 소비 대신 저축을 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전에 비해 저축이 늘어납니다.

② (O) ①의 해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시중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대출을 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증가하므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③ (O)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여 우리나라의 금리가 외국의 금리에 비해 높아지면, 우리나라의 금융 상품에 투자하기 위한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외화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증가하면 환율이 하락하여 수출이 줄어듭니다.

④ (X) ③의 해설에 따라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면 외국 자본의 유입이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경합성과 배제성에 따른 재화의 분류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주어진 표에서 A는 사적 재화, B는 자연 독점, C는 공유 자원, D는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① (O) 가정용 냉장고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으며(배제성), 한 가정이 이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다른 가정은 이를

소비할 수 없습니다(경합성). 즉, 가정용 냉장고는 배제성과 경합성을 지닌 사적 재화로, A의 영역에 포함됩니다.

② (O) 케이블 방송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시청할 수 없으나(배제성), 한 사람이 케이블 방송을 시청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이를 시청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비경합성). 즉, 케이블 방송은 배제성은 있으나 경합성은 없는 자연 독점에 해당하는 재화이며, B에 속할 것입니다.

③ (X) 공유 자원(C)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므로,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④ (O) 공공재(D)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어 수익을 얻기 어려우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해 과소 공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여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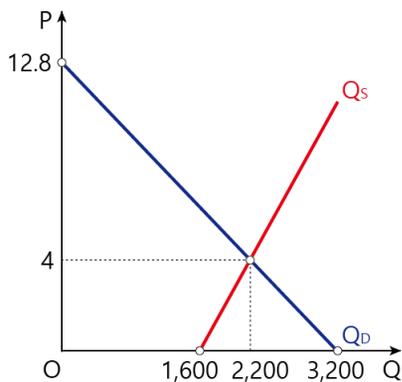
15. [정답] ③

[출제단원] 경제 -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도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와 공급은 일치하므로 $Q_D = Q_S$ 가 성립합니다. $Q_D = 3,200 - 250P$ 이고, $Q_S = 1,600 + 150P$ 이므로 이를 다시 식으로 표현하면 $3,200 - 250P = 1,600 + 150P$ 가 됩니다. 이를 계산하여 식을 정리하면 $1,600 = 400P$ 이므로, 균형 가격 $P = 4$ 가 됩니다. 균형 가격 $P = 4$ 를 주어진 수요 함수 또는 공급 함수에 대입하면 균형 거래량 $Q = 2,200$ 이 됩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16. [정답] ③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사회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사회법’이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 자치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국가가 사적인 경제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를 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을 뜻합니다.

㉠ (X) ‘공법(公法)’이란 공적인 관계(개인과 국가 혹은 사회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헌법·형법·각종 소송법·행정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사법(私法)’은 사적인 관계(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적 문제)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민법·상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회법’은 사법(私法)적 영역에 공법(公法)적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 공법과 사법을 통합하는 제3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 (O) 사회법의 종류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최저 임금법,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사회 보장법	사회 보장 기본법,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국민 연금법 등
경제법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 기본법,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	환경 정책 기본법, 대기 환경 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등

㉢ (O) ‘노동법’이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특수한 법의 영역을 의미하며,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고용 계약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입니다.

㉣ (X) ‘경제법’은 기업의 지나친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자본주의 경제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가들의 독점을 완화시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입니다. 즉,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17. [정답] ④

[출제단원] 법과정치 - VI.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출제영역] 국제법의 법원(法源) 및 국제법의 특징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① (O) 국내법은 국회에 의해서 제정되고, 중앙 정부에 의해 구속력 있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제법은 국회와 같은 범세계적인 입법기관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하여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또한 범세계적인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제 집행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② (O) 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③ (O) 국제법 중 ‘조약’이 국가 간에 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 명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면, ‘국제 관습법’은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④ (X) 헌법 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 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세계인권선언의 법적 규범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8.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쟁의 행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쟁의 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노동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으며,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직장폐쇄

가 있습니다.

- ① (사용자) 노사 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작업장을 폐쇄하여 근로자들이 사업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노동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쟁의행위의 이탈자를 설득하거나,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용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저지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로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③ (노동자) 하던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서, 가장 보편적인 쟁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노동자)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특정한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펼쳐 소비자들이 그 물품을 사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19. [정답] ②

[출제단원] 법과정치 - II. 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정부 형태와 관련하여 제시된 헌법 조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제52조 :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 제53조 제2항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 제61조 제1항 : 국회의 국정 감사·조사권 → 국정감사·조사권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제의 본질적 요소로 분류합니다.
 - ▶ 제63조 제1항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인정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 제67조 제1항 : 대통령의 직선제 → 대통령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 제86조 제1항 : 국무총리제 존재 →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① (X)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시된 헌법 조항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전형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 ② (O) 제시된 헌법 조항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와 관련됩니다.
- ③ (X) 행정권이 행정부와 의회에 분산되어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④ (X) 국무총리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된 헌법 조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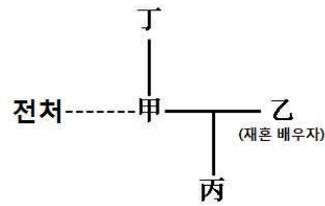
20. [정답] ①

[출제단원] 법과정치 - IV. 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유류분

출제 가능 지수					
난이도 지수					

[인물 관계도]



제시된 사례에서 甲의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민법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68조).

- ① (O) 甲의 유언이 유효하다면, 甲의 전 재산 10억 원은 전처에게 유증이 됩니다. 따라서 甲의 현재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甲의 재산을 1.5 : 1로 상속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때 乙과 丙은 甲의 전처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 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배우자 乙의 법정 상속분은 6억 원(=10억 원×3/5)이므로, 유류분은 3억 원(=6억 원×1/2)입니다. 직계 비속 丙의 법정 상속분은 4억 원(=10억 원×2/5)이므로, 유류분은 2억 원(=4억 원×1/2)입니다. 따라서 丙의 유류분(2억 원)이 乙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3억 원)보다 적습니다.
- ② (X) 丁은 甲의 직계 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1순위 상속인인 甲의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이 있는 상황에서 2순위 상속인인 丁은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의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③ (X), ④ (X) 甲의 유언이 무효라면 甲의 재산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법정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 乙과 직계 비속 丙이 1.5 : 1로 상속을 받게 되므로, 乙은 6억 원(=10억 원×3/5), 丙은 4억 원(=10억 원×2/5)을 상속받게 됩니다. 결국 2순위 상속인인 직계 존속 丁은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